

매출절반 뚝! 면세점 “악”... 임대료도 못낼 판

공항 이용 내·외국인 모두 감소
정부 임대료 인하에 대기업 제외
중소·중견기업 임대료 전체 8.5%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면세점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모두 줄면서 매출이 절반 이하로 곤두박질했기 때문이다. 시내면세점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시내면세점 매출의 70~80%를 차지하는 중국 보따리상(파이공)의 발길이 끊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대책으로 ‘임대료 인하’ 카드를 꺼냈지만, 정작 임대료 대부분을 내고 있는 대기업 면세점은 제외돼 역차별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체 임대료의 10%도 채 되지 않는 중소기업에만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온 것.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중소기업 면세사업자의 임대료를 6개월간 20~35% 인하할 방침이다. 임대료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차인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중 세트’를 발표하며



코로나 19 사태로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 한산한 인천공항 면세점



/독자제공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해 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공공기관의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시티플러스와 그랜드면세점 등 중소기업 면세사업자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반면 롯데·신라·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사업자와 SM면세점과 엔타스튜디오 등 중견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의 취지가 소상공인을 돕는 데 맞춰져 있는 만큼 중소기업 체로 지원 대상을 한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연 1조원에 가까운 임대료를 물고 있는 대기업은 제외하고 공항 전체 임

대 수익의 10%도 채 되지 않는 중소기업만 임대료를 깎아준다는 점에서 ‘생색내기’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인천공항면세점 임대료 수입은 총 1조761억원으로 이중 대기업 면세점 임대료는 9846억원(91.5%)에 달한다. 중소기업 면세점 임대료는 915억원으로 전체의 8.5%에 불과하다. 여기에 중견 면세점마저 제외하면 실제로는 1%에 미치지 못하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셈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기면서 지난달 면세점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40%나 하락했다. 하지만, 임대료 부담은 평소와

같이 유지되면서 대기업 면세점은 매출의 대부분을 임대료로 내야할 상황에 처했다.

업계 관계자는 “10년 전 신종플루 때 인천공항공사에서 임대료를 인하해준 적이 있다”며 “당시에는 일괄적용해서 동일하게 해줬는데 현재는 차등적용을 하고 있다. 업계가 전반적으로 생사기로 내놓았는데, 대기업만 임대료 인하여서 제외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20일 동대문점을 오픈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개점 축하 행사와 대규모 집객행사를 진행하지 않아 이른바 ‘오픈빨’ (개점 초기 매장에 손님들이 몰리는 현상)조차 누리지 못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 업계가 고전하는 상황에서 2호점 개점이 미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예정대로 개점을 진행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갈수록 적어지면서 올초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목표로 잡은 매출 1조 6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1분기 면세점 시장 규모는 전 분기 대비 35~40% 정도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면세점 업계의 2월 매출은 1월과 비교해 50%가량 감소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경기 불황에 코로나까지 겹쳐... 지방금융 자본력, 경고치 ‘간당’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은행대출 ↑
위험가중자산 증가 보통주자본 영향

지역경기 불황 속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방금융지주가 비상이다. 지방금융지주의 주 수익원인 지방은행이 주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영업하고 있기 때문. 코로나19 여파가 지방은행의 영업점 폐쇄와 함께 지역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면서 지방금융지주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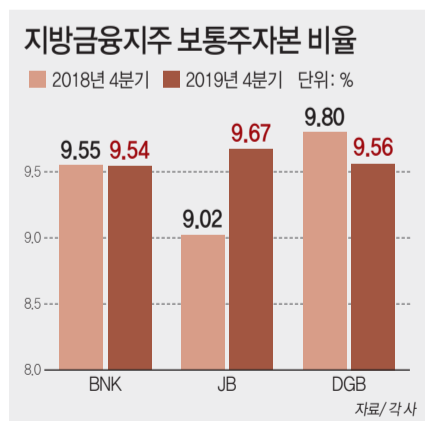
3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JB·DGB 금융 등 3개 지방금융지주의 자본력이 금융당국이 정한 수준을 겨우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지방금융의 보통주자본비율은 평균 9.59%로 BNK 금융 9.54%, JB 금융 9.67%, DGB 금융이 9.56%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9.50%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보통주자본비율이 낮아진 이유는 지방금융지주가 이자이익 방어를 위해 대출성장을 피하는 과정에서 위험가중자산(RWA)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보통주자본비율은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위험가중자산이 많을수록 자본비율이 하락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이 대출을 늘리자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해 보통주자본비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이 지방금융지주의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은행 지점의 모든 직원이 마스크를 쓴 채 창구업무를 보고 있다. /대구은행



것. 보통주자본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이익을 좀 더 많이 쌓거나 손실위험이 있는 자산을 줄여야 하는데, 지역을 거점으로 둔 지방은행의 경우 상황상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DGB금융의 주 계열사인 대구은행은 거점병원 지정, 방역지역 선정, 소속지원 확진 등의 이유로 10개 점포가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또 대구·경북 소재 221개 영업점의 운영시간도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단축했다.

BNK금융의 주 계열사인 부산은행도 본부직원 900여명중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원을 제외하고, 순환 재택근무를 실시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피해로 이어지면서 지방은행의 대출부실과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9월 기준 중소기업 연체율은 대구은행 0.63%, 부산은행 0.66%, 전북은행 0.66% 등으로 모두 하락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급한 신규자금과 만기연장 등을 확대할수록 지방금융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은행은 우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금융지원을 하되 부실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외주시한다는 방침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서민금융진흥원, 저금리 대출·특별자금 마련 “전통시장 소액대출 500억 규모 지원”

점포 당 1000만원 年 4.5% 금리
무등록사업자 경우 한도 500만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민금융진흥원이 저금리 대출과 특별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4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어려워진 상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500억원 규모로 지원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특별자금 500억원을 추가로 확대 지원한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전통시장 상인들이 많다”며 “자금이 부족한 전통시장 상인들은 코로나19 특별자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우선 전통시장 특별자금은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사업자의 경우 상인회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국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하며 1개 점포당 1000만원 한도로 최장 2년 간 연 4.5% 이내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단 무등록사업자의 경우에는 한도가 500만원까지다.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이외에도 기존

에 운영하던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도 눈여겨 볼 만 하다. 해당 사업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전통시장에 대출사업 운영자금을 지원하면 상인회가 소속 상인들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이다.

서울 동대문의 답십리 현대시장, 울산의 학생새벽시장 등이 서민금융진흥원의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으로 상인들의 고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장으로 꼽힌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총 500억원의 특별자금도 마련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계약을 체결한 상인회 소속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특별자금 사업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지자체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상인회를 추천한 뒤 서민금융진흥원에 상인회에 특별자금 한도를 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상인이 상인회에 대출 신청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 대출 재원을 교부한 다음 상인회가 상인에게 대출을 실행해주는 과정을 거친다.

이 외에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나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영세 자영업자라면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운영·시설개선 자금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최장 5년까지 연 4.5% 이내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준다.

/김유진 기자 ujin6326@